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3년여만에 승인

정부 “조속한 방북 지원, 직접 당사자만·정치인은 배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채널 통해 복측과 협의”

정부가 지난 17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3년3개월 만에 입주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을 승인했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도 재추진한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및 인도적 지원 관련 관계부처 협의 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30일 신청한 자산 점검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며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한 “미국과 개성공단 기업인의 자산 점검 방북 목적이나 성격 등을 공유해왔다.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한미 간 공조 하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지난 2016년 2월 가동 중단 사태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기업인들은 정부의 가동 중단 결정에 복한이 폐쇄 통보로 응수하면서 쫓겨나다시피 철수했다. 때문에 설비는 물론 완제품 등 유동자산까지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자산 점검 방북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불허 또는 승인유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3년3개월 만에 자산 점검 방문을 승인한 만큼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가동) 중단된 지 3년이 지난 그런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18일 전주 종남문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원술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장, 김승수 전주 시장, 이원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번에 방북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에 직접 당사자가 되는 기업 측만 먼저 방북해 자신을 확인하고 오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9차 방북 신청 때 더불어민주당 원내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정의당 김중대 의원 등 의원 8명도 함께 방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방북 목적과 시급성을 고려해 순수 기업인들의 방문만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원 등의 방문은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 관련 물자 반출에 대한 제재 위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출 장비

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육간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육간점검이기 때문에 (반출 물자 유엔사 통과 승인 절차 등은) 제외가 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방북 관련해 정부는 복측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임산부 영양 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에 자금 800만 달러 공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WFP와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총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으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차 국면에서 시한을 넘기면서 집행되지 못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게 집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추협 등 내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소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우선’ 국제기구에 공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대북 인도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변인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직접 지원하는 방식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어” 강조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눌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사태”로 불렸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고, 법률적인 정리가 마쳤다”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며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이라며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 5·18의 역사를 새로 밝히며 새롭고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다.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안전취약계층 사고대비 물품 지원

김이재·최영일 도의원,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과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이 각종 재난 및 사고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김이재 도의원



최영일 도의원

대하여 재난 및 사고 대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363회 임시회에서 공동발의 했다.

이 조례에 의해 지원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년·소년가장, 한부모 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이재 의원은 “산불을 비롯한 기상이변 등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전북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삭감된 본예산 추경에 재요구... 심의권 무력화”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서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익산1)는 지난 17일 전북도교육청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모두 추경에 재요구됨으로써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음을 강하게 제기하는 등 질타가 이어졌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비례)은 영재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선발시험지 인쇄비만 지원한 바, 선발관련 운영비까지 추경에 별도로 요구하였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전형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의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모두 추경에 재요구됨으로써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

했다.

황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1)은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민주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민주학교 10개교를 지원하는데, 사업대상학교 선정시 초중고교가 고르게 사업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현재 대입 학생수는 1천명 이상 감소하고 있는데, 미달되는 학교의 정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묻고, 여러 기관의 신중한 논의를 통해 이

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2)은 통학버스안전지도사 인건비가 시군 교육청별로 모두 다른데, 도교육청 소속으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인건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대오 예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익산1)은 학교일반시설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시군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거나 적은 경우 이에 대한 조정 역할도 중요한 바, 특정시군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균형잡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